

해남군, 국가 비상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만전

69건 시책 앞당겨 추진...체험형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내년 상반기 신속집행 65% 목표...공공사업 조기 추진

해남군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국가적 비상상황에 따른 내수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국정운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보고회를 갖고, 각 실과소·읍면별 발굴된 69건의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 완화·경감·면제·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날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안을 분야별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명 군수는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과정을 거치며 송년특수가 사라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

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논의된 사항들은 곧바로 추진에 돌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엔 중점 추진하게 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외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시책들에 대해 12월 중에 시행해 연말연시 경제활성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한다.

해남군은 부서·읍면별로 지역상가 이용하기, 사회경제계기업 구매 활성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맛집·명소 SNS 홍보하기 등에 나설 예정으로 체험형 경제활동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관내 민·관·언이 함께하는 민생 회복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유관기관, 출향향우까지 함께하는 전 군민 캠페인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협력을 확산하



해남군이 지난 16일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별 경기 부양 방안을 공유했다.

〈해남군 제공〉

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들도 조기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1천억원대 지속 발행과 할인판매 확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착한 가격업소 확대,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

적기업 등 구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공공일자리들 비롯해 노인, 중장년, 장애인 일자리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먹거리 바꾸처와 에너지 요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농수축산 분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에 대한 1월 조기집행과 함께 올해 종

은 방안을 얻었던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이 펼쳐진다.

내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대상액의 65%까지 높여 민간의 경기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국내·외 여러 경제여

건이 녹록치 않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에 강한 해남'이라는 남다른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만큼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신안, 내년 국비 4천800억 확보...교통·농수산 인프라 확충

흑산공항·연도교 건설 등 SOC 사업 가속

신안군이 정부의 건축재정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대비 400억원이 증가한 총 4천800억원의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의 건축재정 속에서도 역

대 최대 규모로, 교통SOC, 농수산 개발,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주요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요 국책사업으로는 ▲흑산공항 건설 29억원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 78억원 ▲국도 77호선 개설 461억원 ▲가도항 북구공사 160억원 ▲영산강IV 지구 농업개발사업 100억원 등 교통 및

농수산 개발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국립 갯벌 세계유산보존본부 건립 27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45억원 등 환경 복원 사업 ▲도서식수원 개발 97억원 ▲도서개발사업 189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등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안군은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국고 사업 발굴을 위해 '2026년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차기 사업 준비에도 착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적기에 투입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신안=양홍기자

영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모금 돌입

고향사랑기부 2억2천만원 목표...공사비 확보

영암군은 17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마련을 위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시즌2' 지정기부 모금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2억2천만 원을 목표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비 53억원 중 일부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장비 구입비 2억2천만원 모금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전체 건립비 23억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또는 전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해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20년 만에 개설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의 내년 운영비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 중이며, 이달 한달간 답례품 증량 및 추가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환경운동연합 "대양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대기오염·해양오염 우려...국가 책임 처리 강조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목포시 대양동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며,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목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의료폐기

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신청이 접수됐다.

소각장이 건설될 예정인 대양동 733-10은 기존 자원회수시설과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으로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

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서를 반려하고, 목포시와 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시민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양동은 신안 압해도 갯벌과 연결된 세계자연유산 인근으로,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 침출수와 해양오염 등으로 자연 생태계가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목포로 유입돼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처리는 민간이 아닌 국가나 광역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담보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동부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착공 기념식을 마친 후 경로식당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경로식당·프로그램실 확장 등

나주시는 "최근 남평읍에 위치한 동부노인복지관의 시설 개선을 위해 별관 증축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관 별관 증축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한다. 연면적 500㎡ 2층 규모로 1층은 경로식당, 2층은 프로그램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후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어른들의 안부를 살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부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2개 분야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경로식당, 노인 일자리 사업(210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천849명 회원, 2천5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윤병태 시장은 "복지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형 버스를 도입한 데이터 별관 증축이 완료되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강진군, 벼멸구·집중호우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강진군은 17일 "이달부터 벼멸구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2024년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 2천183곳을 대상으로, 7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농업인이 10%만 부담한다.

강진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8억원을 지원했으며, 소득작목으로 육성 중인 콩의 보험료 자부담분 10%의 절반인 4천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강진군은 쌀기리, 마늘·양파, 과수 피해 농가에 15억원을 이미 지급 완료했으며, 강진농협과 남부농협은 보험금 지급을 완료, 도암농협과 한들농협은 신청자 순으로 지급 중이다. 연내 지급 완료로 목표를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정영록기자



김산 무안군수 "민생 불안해소 현안 차질없이"

긴급 간부회의 소집...예산 불용액 최소화 당부

무안군은 17일 "전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따라 실단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민생안정과 군민행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태세 구축, 민생 불안해소 등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업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품위·정령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유지,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서민 생활 및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지역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투자 분야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파를 대비한 안전 확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 한파 응급대피소 등 시설관리 철저, 폭설을 대비한 대설 피해 5대 유형을 집중관리하고 제설장비 등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11일부터 부군수를 대책반장으로 지방행정반, 지역경제반, 취약계층지원반, 안전관리반 등 4개반을 편성해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불확실성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무안=김상호기자